미국-EU FTA, TTIP 협상 현황과 전망*

강 유 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 서론

1990년대까지 세계 통상체제의 중심축이 GATT/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 체제였다면, 2000년 이후 지난 10여 년간은 FTA를 주축으로 한 양자주의가 활성화된 시기였다. 양자간 FTA의 확산은 다자주의와의 병행성에 의문을 제기하여, 걸림돌(stumbling stone)이 될 것인지, 아니면 주춧돌(stepping stone)이 될 것인지 통상학계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다수의 국가를 포함하는 이른바 차세대 메가 FTA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논의가 사라졌고, 세계 통상질서는 거대블록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2013년 초 공식화된 미국과 EU 간의 환대서양경제·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은 이러한 메가 FTA의 대표격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TTIP는 미국과 EU라는 거대 선진국 간에 체결된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클 수밖에 없다. 미국과 EU는 2013년 전 세계 GDP의 45%, 총무역의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TTIP의 탄생은 다자간 통상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적 측면에서 한 국가의 통상정책은 주변국의 통상정책에 큰 영향을

* (ydkang@kiep.go.kr 02-3460-1123).

받는다. 과거 지역주의에 소극적이던 일부 국가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FTA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데에는 유럽단일시장과 북미자유무역시장(NAFTA)과 같은 거대 경제권의 등장과 주변국의 경쟁적인 FTA 움직임에 자극을 받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메가 FTA의 등장은 참여국은 물론, 주변국의 무역·투자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통상정책에도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한국은 그동안 다자체계 무역의 최대 수혜자였고, 2000년대 적극적인 FTA 정책으로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메가 FTA의 등장은 한국의 통상정책도 이에 맞춰 변화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TTIP가 추진된 배경을 살펴보고, 현재까지의 협상 추진현황을 점검하도록 한다. 또한 한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글로벌 통상질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찰해보도록 한다.

2. TTIP 추진 배경

2.1. 미 · EU 간 통상협력 관계

미국과 EU는 전 세계 무역의 30%, 외국인직접투자의 17%를 차지하며,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무역·투자국이다. 양측의 무역은 2008년 1조 달러에 이른바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감소한 바 있으나, 다시 증가추세를 보여, 2014년 중에는 예전의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회원국의 대미 투자는 2012년 누적기준으로 16조 달러로 이는 미국으로 유입된 외국인투자의 62%를 차지한다. 미국의 대EU 투자는 이보다 더 많은 22조 달러로 EU로 유입된 전체 외국인 투자의 50%를 차지한다. 이러한 상호간의 교차투자로 인해 미국과 EU 간의 무역 중 1/3이 대서양 양측에 위치한 계열사 간의 기업 내 무역(intra-firm trade)으로 추정된다.[1)]

상호 간에 무역·투자 관계가 밀접한 만큼, 미·EU FTA의 가능성은 1990년대부터 비공식적인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상호 간 FTA의 필요성은 산업계를 중심으로만 표출되었을 뿐,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가 제시될 수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낮은 관세구조로 인해 예상되는 수출증가 효과가 작았기 때문이다. 미국과 EU의 제조업 평균관세는 각각 2.0%와 2.4%에 불과하고,

1) Hamilton and Quinlan(2012)에 따르면 기업 내 무역은 2010년 EU의 대미수출 중 60%를 차지하며, 미국의 대EU 수출 중 30%를 차지한다.

상호간에 시장접근성은 이미 높아, FTA를 통한 개방효과는 신흥국과의 FTA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2] 이에 미국은 2000년대 이후 중남미 및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FTA에 역점을 두었으며, EU는 2006년 이후 신흥국과의 FTA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림 1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EU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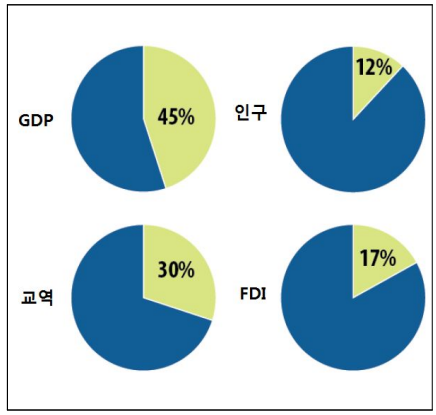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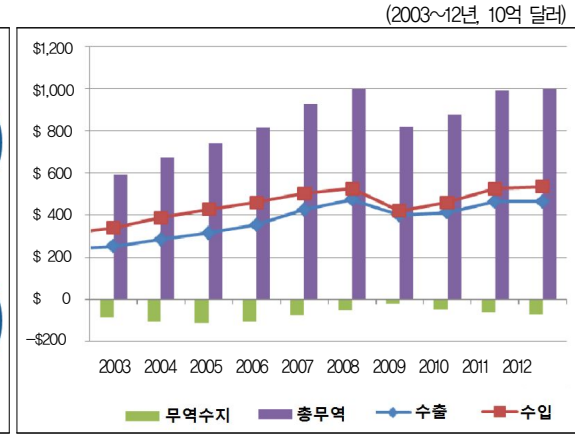


그림 2 미국의 대EU 수출입 변화

(2003~12년, 10억 달러)



자료: Akhtar and Jones (2014). p.2, p.9.

미국과 EU는 상호간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해 포괄적 FTA 보다는 산업별 접근방식을 택해왔다.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이 양측은 산업계 간의 협의체 구성, 산업별 대화 등을 통해 통상현안에 대한 조율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의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데, 포괄적 협의가 아닌 지엽적 이슈에 치중했다는 인색한 평가가 있는 반면(ECIPE 2012), 산업계 간의 협의를 통해 통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무역·투자 이슈를 수면 아래에서 해결하는 조용한 합의 의 관행을 만들어내었다는 평가도 있다. 양측은 협의체를 통해 통상현안에 대한 조율을 추진하였으나, 시장개방에 관한 구체적인 성과는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한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정치권의 추진의지가 부족과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이다. 가령, 1998년에 제안된 신대서양시장협정(New Transatlantic Marketplace Agreement)의 경우 당시 EU의 브리턴(Leon Brittan) 통상장관이 제안하였으나, 오히려 EU 내에서 프랑스 등 주요 회원국이 반대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2) 반면에 Ken Monahan은 양측의 관세가 낮더라도, 활발한 기업 내 무역으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이 불필요한 관세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Bloomberg의 기사에 따르면, 2011년 미국기업들은 자동차, 기계, 화학 등의 분야에서 EU로부터의 기업 내 수입을 위해 24억 달러의 관세를 지불하였다(참고문헌 참조).

표 1 미국과 EU의 통상협력 사례

사례	내 용
Transatlantic Business Dialogue(TABD, 1995) → 2013년 1월 Transatlantic Business Dialogue(TBC)로 발전	– 미·EU 산업계 간의 협의채널을 위해 창설(美 Ron Brown 통상장관 제안) – 정부간 접촉 이전에 산업계간 사전협의를 거침으로써 불필요한 통상분쟁을 미연에 방지 – 비관세장벽의 철폐, 규제협력 추진
New Transatlantic Marketplace Agreement(1998)	– ① 미·EU 간 기술장벽 철폐(상호인정 및 규제조율), ② 공산품 관세철폐(2010년까지), ③ 서비스 무역자유화, ④ 정부조달시장, 투자 부문 확대개방 추진(EU 통상장관 Leon Brittan 제안) – EU 회원국 내 반대와 WTO와의 병합성 문제, 농업개방의 난항으로 실현되지 못함.
Transatlantic Economic Council (TEC, 2007)	– 양측의 무역·투자증진을 위한 정부 간 협의체로 출범 ※ Framework for Advancing Transatlantic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European Union – 규제장벽 철폐 및 협력에 초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실익이 적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던 FTA에 대해 양측은 왜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하였을까? 2010년 하반기에 발표된 EU의 통상백서에는 미국, 일본과의 통상협력은 FTA가 아닌 경제대화를 통해 추진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EC 2010). 이는 상호 간에 FTA를 추진할 의사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TTIP 추진에 관한 양측의 입장정리와 결정은 2011~2012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와 유럽재정위기(2010~2012)를 통해 나타난 미국과 유럽경제의 변화와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에 대한 자각에 그 원인이 있다.

2.2. TTIP 추진 대내적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는 미국과 유럽의 대내경제 상황을 악화시켰다. 미국경제는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과거의 호경기는 아직까지 요원한 상항이다. 유럽경제의 경우 재정위기와 유로존 체제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전례 없는 더블딥을 겪었다. 2010~2012년의 경기침체의 가장 큰 특징은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카드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미국과 EU의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하고 있으나, 역대 최고수준인 국가채무 문제로 인해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 미국은 부채축소 논란으로 의회와 행정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으며, 유럽 국가들은 경기침체 속에서도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진퇴양란에 봉착하였다. 기준금리는 이미 역대최저 수준으로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의 여지조차 작아지면서 전통적인 정책조합(policy-mix)을 활용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다. 특히 유럽의 경우 일부국가의 금융권 부실로 인한 부채축소(deleveraging) 현상과 인구고령화를 감안할 때, 자체적인 성장 동력의 확충에는 한계가 있음이 명확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역과 투자를 통한 경기활성화 방안은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김정수, 2013). 미국과 유럽의 여론 조사는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가 일자리 창출에 있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전혜원, 2013).

그동안 양측 간 FTA를 주장하는 쪽은 산업계였으나, 경기침체를 거치면서 정치계도 미·EU 간 FTA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2012년 중 FTA에 대한 주장은 주로 미국 쪽에서 표출된 것으로 보이나, 2012년 말을 전후해서는 유럽 정치계에서도 FTA 지지의견이 확산되었다. 독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는 미국과의 FTA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하였으며,[3] 영국 카메론(David Cameron) 총리는 영국의 EU 탈퇴 가능성에 대한 발언과 별도로 미국·EU FTA를 G8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로 설정할 것임을 밝혔다.[4] 과거 미국과의 양자무역 자유화 논의에 반대를 표시한 바 있는 프랑스도 문화산업에 대한 제외를 조건으로 미국과의 FTA에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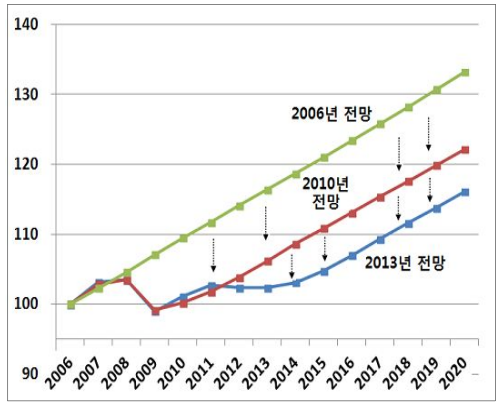
2.3. TTIP 추진 대외적 배경

TTIP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대외정세의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유럽의 쇠퇴에 관한 인식의 확산, 미국의 이해관계, 미국과 유럽의 입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유럽경제의 저성장과 고실업은 1990년대부터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왔으나,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유럽인의 인식 속에 위기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EU의 경제성장률은 점차 하락해 왔으며, 실업률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EU의 GDP 장기전망은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경제에서 EU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해 왔다.

3) "Merkel says eurozone not 'closed shop' to UK" (2013. 1. 24), Financial Times.
4) "David Cameron sets free trade agreement as his G8 priority" (2013. 1. 1), The Guardian.
5) "La France et l' Allemagne favorables une zone de libre-échange avec les Etats-Unis" (2013. 2. 13), Le Monde.

그림 3 EU의 실질 GDP의 성장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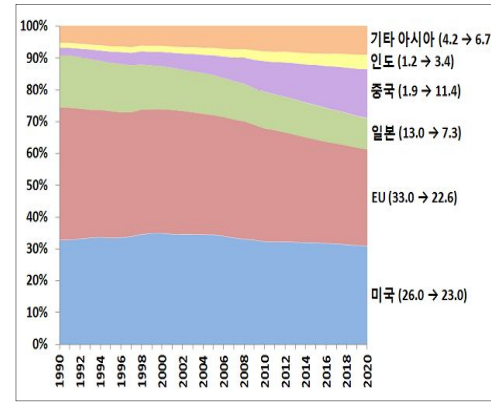
(2006년의 GDP를 100으로 산정)



주: 1) 2006년 12월, 2010년 4월, 2013년 3월 전망간의 비교.
2) 2013년 전망(파란색)에서 2006~12년 GDP는 실적치이며, 그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Global Insight.

그림 4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

단위: %



주: ( ) 안은 1990년과 2020년 사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를 의미함.
자료: Global Insight(2013년 3월)의 전망자료 등을 참고로 저자 작성.

둘째,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튼튼한 유럽과 안정적인 대서양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재정위기와 내부갈등으로 인해 EU/유로존이 해체 또는 장기침체에 빠질 경우 이는 중국 등 신흥국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미국의 국제적 입지도 약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일부 미국 언론이 TTIP 추진을 Economic NATO로까지 지칭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6]

셋째, 신흥국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은 여전히 글로벌 규범제정(rule-making)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글로벌 통상규범, 기준 및 표준 설립 등에서는 여전히 신흥국에 비해 월등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7] 특히 미·EU 간의 FTA를 통해 통상규범을 정립하는데 성공할 경우, 글로벌 무역체계를 미국과 EU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과거의 선례를 볼 때, 서비스무역, 규범,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시장 등을 포함하는 미·EU 간의 수준 높은 FTA가 추진될 경우, 양측은 협상 결과물을 글로벌 어젠다로 추진함으로써 다자체계에서도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6) Global News, "US-EU FTA negotiations will start "economic NATO" brewing", 28 February 2013.
7) 세계의 표준과 강제기준은 대부분 유럽에서 탄생했으며 유럽이 주도하고 미국이 뒤따르는 패턴을 보여 왔다. 가령, ISO(국제표준화기구)와 CEN(유럽표준화위원회) 간의 비엔나 협정과 IEC(국제전기표준화위원회)와 CENELEC(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 간의 드레스덴 협정은 유럽표준을 그대로 국제화하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ISO와 IEC의 결정은 실질적으로 유럽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글상자 1 미 · EU FTA의 경제적 효과

– 미 · EU 간 전면적 관세철폐(ECIPE 2010): 2~3.5%의 생산성 향상 고려
  • EU의 대미 수출은 7~18% 증가하고 EU의 GDP가 0.32~0.47%(465억~693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10~15년)
  • 미국의 대EU 수출은 8~17% 증가하고 GDP는 0.99~1.33%(1,352억~1,819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제3국에 미치는 GDP 감소효과는 미미

– 미 · EU 간 비관세장벽 전면 철폐(Ecorys 2009)
  • EU와 미국의 실질소득이 연평균 각각 0.27~0.72%, 0.13~0.28% 증가할 것으로 예상(2008~2018년)
  • 비관세장벽 철폐로 인한 수출증가효과는 전가전자, 자동차, 식품, 제지, 보험 등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 미 · EU FTA(Francois 2013)
  • EU와 미국의 GDP가 2027년까지 각각 연평균 0.5%, 0.4% 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자료: 김영귀 外 (2013).

3. 협상 경과

3.1. 협상 준비 과정

2010년 하반기에 발표된 EU의 통상백서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 거대경제국과의 통상협력은 포괄적 FTA가 아닌 비관세 장벽 철폐 위주의 경제대화 방식에 따를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EC 2010).[8] 이를 감안할 때, 적어도 2011년 상반기까지 TTIP 추진은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TTIP 추진은 2011년 11월의 미·EU 정상회의 이후 추진여건이 빠르게 조성되었다. 2011년을 전후하여 미국경제는 미약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었으나, EU는 이탈리아, 스페인 등 대형회원국의 경제위기설이 부상하는 가운데, 경기침체에 재진입하고 있었다. 미국과 EU 정상은 양측의 통상장관을 대표로 하는 고위급 작업반(High Level Working Group for Job and Growth)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 작업반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논의의 초점은 고용과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데 맞춰졌다. 논의의 초기에는 이 작업반의 성격이 FTA를 위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작업반의 성과물이 발표되기 전에 미 상원이 미·EU FTA 지지를 선언한 것에 비춰볼 때, 초기부터 TTIP의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2년 6월 고위급 작업반은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보고서

8) 2010년 11월에 발표된 EU의 신통상백서(Trade, Growth and World Affairs)에 따르면 EU는 ASEAN 회원국 및 인도, 캐나다, MERCOSUR와는 FTA 협상을 추진하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거대무역국과는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해 포괄적 FTA가 아닌 규제 등 비관세장벽 철폐 위주의 협상을 추진할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범대서양경제회의(TEC: Transatlantic Economic Council)과 같은 협의체를 활용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는 공식적으로 미·EU 간의 포괄적 FTA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상호간의 FTA를 통해 다자통상체계에 기여할 수 있는 통상규범을 제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같은 해 10월 유럽의회는 미·EU FTA 추진에 대한 찬성의사를 표명하고, 2013년 상반기부터 FTA 협상을 추진하도록 EU 집행위원회에 협상위임권(mandate)을 부여했다.

미국과 EU는 2013년 2월 1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FTA 협상을 공식화하였다. 협상의 공식화 선언 이틀 전에 발표된 고위급 작업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TTIP는 크게 3대 분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시장접근으로 관세철폐 인하에 초점을 둔다는 측면에서 통상적인 FTA와 유사하다. 두 번째 분야는 규제이슈(비관세장벽) 분야로 TTIP에서 가장 큰 초점이 맞춰지는 분야이다. 특히 양측의 관세수준은 일부 농산품 품목을 제외하고는 이미 낮은 수준으로, 비관세 장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한 목표일 수 있다.

표 2 TTIP 추진 공식화까지의 과정

일시	내 용
2011년 11월 28일	EU · 미 정상회의 • 양측 정상은 양측의 통상장관을 대표로 하는 고위급 작업반(High Level Working Group for Jobs and Growth)을 구성하도록 지시
2012년 2월 22일	미 상원은 EU · 미 FTA 추진에 대한 찬성의사를 표명
6월 19일	고위급 작업반 중간보고서 발표(2012.6.19) • EU · 미국 간의 포괄적 무역 · 투자협정(이하 EU · 미 FTA로 지칭)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이 무역협정은 관세, 규제 및 비관세장벽,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재권을 포함할 것을 권고 • EU · 미가 각각 체결한 제3국과의 FTA를 조율하고 다자통상체계에 기여할 수 있는 통상규범을 제시하도록 제안
10월 23일	유럽의회(2012. 10. 23)는 EU · 미 FTA 추진에 대한 찬성의사를 표명 • 유럽의회는 2013년 상반기부터 FTA 협상을 추진하도록 집행위에 협상 위임권을 승인
2013년 2월 8일	EU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미국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합의
2월 11일	고위급 작업반 최종보고서 발표(2013. 2. 11) • EU · 미 FTA(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의 3대 분야로 시장접근(분야 ①), 규제이슈 및 비관세장벽(분야 ②), 국제통상 규율 및 차세대 협력(분야 ③)을 제시 • 분야 ①은 통상적인 FTA와 유사하나, 분야 ②에 초점을 두고 일반적인 FTA보다 수준 높은 SPS plus와 TBT plus를 포함할 것임을 강조 • 분야 ③은 EU · 미 FTA에서 합의된 내용을 글로벌화하여 제3국과의 FTA를 조율하는 한편, 다자무역체제 정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포함
2월 12일	오바마 미대통령은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를 통해 EU와의 FTA 협상출범을 공식화
2월 13일	EU 집행위원장,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미대 통령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FTA 협상시작을 공식화

자료: 김영귀 등(2013), p. 5.

세 번째 분야는 국제통상 규범분야인데, TTIP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국제 규범화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특히 양측이 제3국과 체결한 기체결 FTA의 조율을 시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미국과 EU 양측과 FTA를 추진한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3.2. TTIP 협상 과정

2013년 2월 TTIP 추진이 공식화된 이후 미국과 EU 양측에서는 협상시작을 위한 내부절차가 진행되었다. 美무역대표부(USTR)는 3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의 TTIP 협상의사를 의회에 통보함으로써 90일간의 의회자문(consultation)과정을 거쳤다. EU 측에서는 5월 21일 EU 집행위원회의 통상총국(DG Trade)가 EU 이사회로부터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위임권(mandate)을 부여받았고, 이틀 후 유럽의회는 TTIP에 대한 지지결의문을 채택하였다.

6월의 통상장관 회담에 이어 1차 협상은 7월 8~12일에 진행되었다. 2013년 중 양측은 당초 예상대로 3차례의 협상을 가졌고, 2014년 3월에는 4차 협상을 마쳤다. 구체적인 협상결과는 일반에 공개되고 있지 않는데, 아직까지 원론적 합의와 접근방식의 수렴 등 협상방식(modality)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TTIP 협상의 큰 특징 중 하나는 협상의 내용과 관련되어 공개되는 외부자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미국 상공부를 통해 공개되는 외부자료는 적으며, EU 집행위원회의 통상총국을 통해 공개되는 자료 또한 제한적이다. 지금까지의 협상내용을 <표 3>에 정리하였다.

표 3 TTIP 협상과정 및 주요내용

일시	내 용
1차 협상 2013년 7월 8~12일, 워싱턴	○ 주요 협상분야의 설정(시장접근, 정부조달, 투자, 에너지 및 원자재, 규제, 위생 및 검역, 서비스, 지재권, 중소기업, 분쟁해결, 경쟁정책, 통관 및 무역촉진, 국영기업)
2차 협상 11월 11~15일, 브뤼셀	○ 1차 협상의 합의에 기초하여 투자, 서비스 무역, 에너지 및 원자재 규제이슈 등을 논의 • 투자: 투자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 협의 • 서비스: 국경 간 서비스(mode 1), 금융서비스, 통신서비스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협의와 특히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의 시장접근 논의 • 규제: 기술장벽에 대한 규제일관성 및 양측의 규제조화(양립성)가 강화될 필요가 있는 분야 협의(의료기기, 화장품, 의약품, 화학물질, 살충제, 정보통신기술(ICT), 자동차) • 에너지 및 원자재: 양측이 직면한 에너지 및 원자재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방향 논의

표 3 TTIP 협상과정 및 주요내용 (계속)

일시	내 용
3차 협상 12월 6~20일, 워싱턴	○ 시장접근성 강화(Market Access), 규제정합성 향상(Regulation), 무역제도개선(Trade related rules)의 3개 협상 분야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 • 시장접근성 강화는 관세철폐, 공공조달시장 개방, 서비스 시장 개방 및 투자촉진 분야를 포함 • 규제정합성 향상은 보건, 안전, 환경, 금융, 정보보안 등 주요 분야의 규제에 대해 양측의 상호 정합성을 향상을 추구 • 일부분야에서의 기술규제에 대한 상호인정이 논의 진행되었으며,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에서는 제조시설 검사에 대한 상호인정 가능성이 논의됨. • 화학분야는 화학물질 상호 평가 인정문제가 논의 • 무역제도개선 분야는 무역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에너지·원자재 접근성, 일할 수 있는 권리 및 환경과 같은 이슈를 조기에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둠.
4차 협상 2014년 3월 10~14일, 브뤼셀	○ 3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 • 시장접근: 관세(이미 offer 교환), 서비스, 공공조달(offer 교환방식 논의) • 규제(비관세장벽): 규제 일관성 및 양립성, TBT(이미 상호 간 제출된 초안에 대한 논의), SPS(초안 작성의 배경에 관한 논의) • 통상규범: 노동 및 환경(기존 FTA 활용), 에너지 및 희귀자원(EU가 TTIP에 포함시키기를 희망),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절차 간소화 추진)

자료: 보도자료 등을 참고로 저자 작성.

4차 협상까지의 상황을 협상의 3대 분야인 ① 시장접근, ② 규제(비관세 장벽), ③ 통상규범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접근 분야의 경우 양측은 상품양허안을 교환한 것으로 관측된다. 서비스 양허안의 경우 미국은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 따르는데 반해 EU는 전통적으로 열거주의(positive list) 방식으로 개방을 함으로 양측이 이에 대한 조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9] 공공조달 부문의 경우 미국 일부 주(state)의 FTA 참여문제가 대두되면서 미국 측의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규제 분야의 경우 TTIP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서 양측이 FTA를 통해 가장 많은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화학, 식품위생 등의 분야에서 양측은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양측의 협상은 규제의 일관성 및 양립성에 관한 원칙 및 의견수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큰 진전을 보인 것으로 파악되지는 않는다. 기술장벽(TBT)의 경우 양측 산업계를 통해 이미 많은 정보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상호간에 초안이 제출된 상황이므로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품위생

9) 미국은 FTA를 통한 서비스 개방 시 포괄주의 방식을 사용하여 왔으며, 한미 FTA의 서비스 부문은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방되었다. 반면에 EU는 역내단일시장 완성과정에서 열거주의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역외국과의 서비스 협상에도 열거주의를 사용하여 왔다. 한·EU FTA의 서비스 부문은 열거주의 방식으로 협상되었다.

(SPS)의 경우 상호간 초안 작성에 대한 배경설명 정도까지만 진전이 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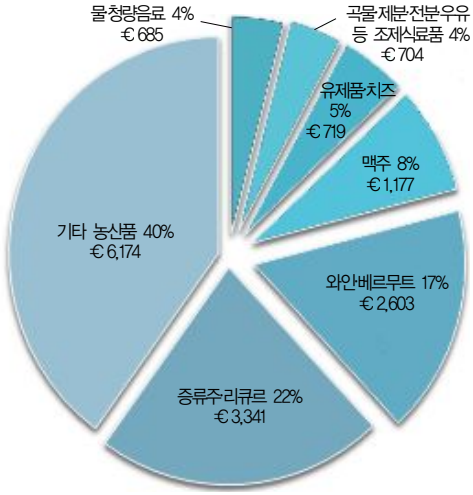
셋째, 통상규범 분야에서는 몇 가지 진전 상황이 관측된다. 양측은 FTA에 포함되는 노동 및 환경조항의 경우 기체결 FTA를 준용하기로 하였으며,[10]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분야에서는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EU측은 에너지 및 희귀자원 관련 조항을 TTIP에 포함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해관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제안이므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실무진 차원에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3.3. 농산품 부문의 협상

2013년 기준으로 EU는 미국에 154억 유로의 농산품(수산, 식품, 주류 포함)을 수출하였으며, 미국은 EU에 97.5억 유로의 농산품을 수출함으로써 EU가 56.5억 유로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농산품 부문은 미·EU 간 총 무역의 5% 정도에 불과하나, 제조업에 비해 관세수준이 높고, 식품안전 및 검역(SPS) 등 비관세 장벽이 높은 분야이

그림 5 2013년 EU의 대미 농산품 수출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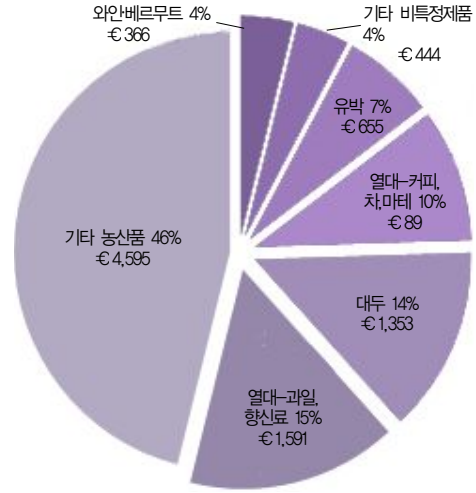
단위: 백만 유로



주: %는 총 대미 농산품 수출액(154억 유로) 대비 비중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28 agricultural trade with United States.

그림 6 2013년 미국의 대EU 농산품 수출품목

단위: 백만 유로



주: %는 총 대EU 농산품 수출액(97.5억 유로) 대비 비중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28 agricultural trade with United States.

10) 미국은 기체결 FTA에 노동과 환경을 분리하여 별도의 장(chapter)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나, EU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통해 하나의 장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상 큰 차이는 없으므로, 양측의 수렴은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특히 EU의 농산품 평균관세는 14.2%(단순평균)로 4.7%인 미국에 비해 현저히 높다. 농산품 부문은 WTO 체제 하에서도 미·EU 간에 통상 분쟁이 많았던 분야로 TTIP 협상과정에서 과거의 분쟁이 다시 표면화될 소지가 크다. 특히 미국의 공세적 입장에 대해 EU가 대응하는 형식으로 협상이 전개되고 있다.

예상되는 대표적인 쟁점으로는 유전자변형식품(GMO), 미국산 호르몬 투여 쇠고기, 지리적 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를 들 수 있다. 첫째, GMO의 경우 EU는 1990년대 초부터 GMO 제품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여 왔으며, 미국과 달리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현재 EU는 전 세계에서 50여 종, 연간 3억 톤가량의 GMO를 수입하고 있으나, 이 식품들은 전적으로 가축사료로만 사용될 뿐, 일반 소비자에 대한 식품 판매는 금지되어 있다. 그동안 미국정부와 농산품 업계는 EU의 GMO 식품 수입금지 조치가 양측의 농산물 수출액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EU의 수입제한 철폐를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EU는 국민건강과 환경보호,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GMO 식품의 수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여론 또한 반대의 입장이 강하다. 더구나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GMO 수입반대를 전제로 TTIP에 대한 찬성입장을 보인 바 있어, 협상 중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둘째, 호르몬 투여 쇠고기의 경우 EU는 소비자 안전을 이유로 수입금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관세를 철폐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는데, 2013년 말 타결된 EU·캐나다 FTA의 예를 들어 호르몬을 투여하지 않은 육류에 한해 수입쿼터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호르몬 투여 쇠고기 수입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 대립은 식품규제와 관련하여 위험수용자(risk-taker) 입장을 보여 온 미국 식품산업계와 위험회피(risk-aversion) 성향이 강한 EU 간의 규제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향후 어떠한 형태로 양측의 입장이 조율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3국 입장에서도 유심히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양측의 기체결 FTA와 제3국의 관련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리적 표시제의 경우 EU는 회원국의 지명이름을 딴 페타(Feta) 치즈, 파르마(Parma) 햄 등을 미국 식품업체들이 독자적으로 생산·판매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제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이 요구를 수용할 경우 생산시설을 EU의 해당지역 내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상품명을 변경해야만 한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식품업계로서는 부담이 될 것임이 자명하므로 미국 측은 지리적 표시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U는 한국, 싱가포르와의 FTA를 통해 지리적 표시제를 관철시킨 바 있어 미국과 어떠한 형태로 합의를 도출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3.4. 향후 협상전망

미국과 EU 양측은 올해 여름에 앞서 5차 협상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를 가용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직 획기적인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미국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TTP 협상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어, TPP와 TTIP 간의 정합성을 고려하면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양측이 협상 시작 후 불과 8개월 만에 4차 협상까지 진행했다는 점은 외형상으로는 진도가 무척 빠른 것이며, 양측의 정책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TTIP는 추구하는 목표와 협상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협상을 완료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FTA이다. 당초 현EU 집행위원회의 임기가 종료되는 2014년 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당초 목표를 늦춰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종료 시점인 2016년 말까지 타결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협상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접근에 관한 협상은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규제 및 비관세장벽 분야에서는 양측의 차이가 커, 전면적·중심적 협상보다는 분야별 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산업계의 요구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협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협상을 전후하여 해당 산업계를 초청, 공청회와 세미나를 독려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의 모멘텀(Momentum)[11]을 발굴해 내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협상은 중층구조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아직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협상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식품 및 화학 관련 규제, 농업보조금 문제 등에서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가령, 미국의 식품규제가 완제품 중심인데 반해 EU의 규제는 전 가치사슬(value-chain)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식품, 화학 분야에서 규제차이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유전자변형식품(GMO)이다. 미국 농식품업계는 TTIP를 통해 양측이 대립 중인 미국 식품규제 수용을 요구하고 있으나,[12] EU의 환경단체 및 소비자 단체의 입장 또한 단호하여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예정한 협상기한 내 조속한 타결이 가능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되는 상품관세 철폐와 제조업 분야 규제완화를 우선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

---

11) 물체가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변동하려는 경향. 본래 물리학 용어로 동력을 말하며, 추진력 · 여세 · 타성이라고 한다. 기하학에서는 곡선 위에 있는 한 점의 기울기를 나타내며, 경제학에서는 한계변화율을 뜻한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상승추세를 형성했을 경우, 얼마나 가속을 붙여 움직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12) 미국농민연맹(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 외 59개 단체공동성명. 2012.11.15./Without Agriculture, U.S-EU FTA Would Struggle In Congress, Inside US Trade, November 12, 2012. 미국 식품업계가 EU에 수정을 요구 중인 현안으로는 GMO 및 라벨 표기 규정, 동물용 성장호르몬 사용규정, 소, 돼지 사료첨가제(ractopamine) 관련 규제, 지리적 표시제 등이 있다.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4.1. 단기적 효과: 무역전환

2013년을 기준으로 미국과 EU는 각각 한국의 2위와 3위의 수출국이며, 양 경제권에 대한 수출은 한국 총수출의 20%에 이른다. 따라서 TTIP가 발효될 경우 한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무역전환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영귀 등(2013)에 따르면, 미국과 EU가 상호간에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한국의 대EU 수출은 누적적으로 약 2.17억 달러, 대미수출은 약 1.67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별로는 우선 대EU 수출은 승용차(-0.8억 달러), 석유제품(-0.13억 달러), 차량부품(-0.1억 달러), 기타 플라스틱(-0.09억 달러) 순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난다. 대미 수출은 석유제품(-0.3억 달러), 승용차(-0.3억 달러), 타이어(-0.09억 달러), 차량부품(-0.05억 달러) 순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난다. 양측에서 공통적인 현상은 한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석유제품의 수출이 감소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TTIP 발효 시 한국의 실질 GDP는 시나리오에 따라 0.02%~0.05%, 후생수준은 4.31~5.19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TTIP 발효에 따른 한국의 산업생산은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주로 섬유, 자동차, 수송기기 등의 산업에서 생산 감소가 예상되며, 철강, 금속, 전자, 기계 등 중간재의 경우 수요증가로 인해 오히려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미·EU FTA로 인한 수출변화

단위: 억 달러

시나리오[1]	對미 수출[2]	對EU 수출[3]
농업	△0.03	△0.01
제조업	△1.64	△2.16
계	△1.67	△2.17

주: 1) 100% 관세철폐 시나리오, 식품은 농업에 포함.
2) 對EU 수출: 493.79억 달러(2012년), 557.27억 달러(2011년).
3) 對미 수출: 595.24억 달러(2012년), 562.08억 달러(2011년).
자료: 김영귀 등(2013) p. 11에서 인용.

TTIP의 경제적 효과는 관세장벽이 아닌, 비관세 장벽의 철폐에 의한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ECORY(2009)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EU 간의 관세장벽은 3~4% 수준인데 반해 비관세 장벽은 음식·음료, 화장품, 자동차 등의 부문에서 26~73% 정도

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표 5 참조>. TTIP를 통해 이와 같은 비관세 장벽이 전면 철폐될 경우 2008~18년 미국과 EU의 수출은 각각 연평균 6%와 2%씩 증가하고, 수입은 각각 연평균 4%와 2%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앞서 관세철폐의 경우와 같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전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4.2. 중장기적 효과: 규제 조화 및 호환성 개선

그러나 산술적인 무역전환 효과만으로 경제적 손실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세 가지 측면에서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연구(Francois 2013)에 따르면, TTIP 발효 시 장기적으로는 제3국의 수출과 생산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TTIP의 효과로 미국과 EU의 GDP가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미국과 EU의 GDP 증가와 이에 따른 수입수요의 증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미국과 EU 간의 규제조화 및 호환성 개선은 역외기업의 규제순응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이 경우 한·미, 한·EU FTA를 통해 미국과 EU 시장에 호혜적 접근성을 갖춘 한국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기업입장에서 미국과 EU의 통합시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 및 생산 공정상 비교우위 활용을 제고할 수 있다.

표 5 미국과 EU의 비관세장벽

단위: %

산업분야	미국의 비관세장벽	EU의 비관세장벽
화학	21.0	23.9
제약	9.5	15.3
화장품	32.4	34.6
전자	6.5	6.5
사무·통신장비	22.9	19.1
자동차	26.8	25.5
항공	19.1	18.8
음식,음료	73.3	56.8
금속	17.0	11.9
섬유,의류	16.7	19.2
목제, 종이제품	7.7	11.3

주: 미국과 EU의 규제차이 및 비관세장벽의 무역비용을 관세상당치(%)로 측정.
자료: Ecorys (2009).

TTIP에 국내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거대국 간의 FTA라는 점 외에도 한·미, 한·EU FTA가 이미 발효된 상황에서 한국의 FTA 체결국 간에 추진되는 FTA이기 때문이다. 또한 양측은 기체결 FTA에 대한 조율을 시사하고 있어, 양립성(parity)에 대한 고려에도 불구, 세부 측면에서 상이한 점이 발견되는 한·미, 한·EU FTA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한·미, 한·EU FTA는 원산지 규정, 직접운송, 수리 후 재반입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 미국이 한국의 관세환급제도를 인정한데 반해, EU는 시한의 범위(5년)를 제시하였으며, 이후 ASEAN 회원국과의 FTA에서는 관세환급을 전면불허 하는 등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TTIP의 협상추이 및 최종결과가 한·미 및 한·EU FTA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인 예상은 어렵다. 그러나 TTIP의 추진배경 및 목적, 미국과 EU 양측의 입장, 한·미, 한·EU FTA 이행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감안할 때, 양 FTA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5. 글로벌 통상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대응방향

5.1. 글로벌 통상질서에 미치는 영향

TTIP가 글로벌 통상질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우려와 기대가 뒤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 협상이 진행되어 당초 목표로 했던 합의를 도출할 경우, 미국과 EU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입지가 더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미국과 EU가 규제의 조화 또는 상호인정을 통해 공동의 규범과 기준을 도출할 경우, 글로벌 규제경쟁에서 EU와 미국의 입지가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다. 2013년 10월 EU의 드휴트(De Gucht) 통상장관은 TTIP를 살아있는 협정(living agreement)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 요소로서 강한 제도(institutions)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13] 이 발언은 양측 관련 기관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의를 통해 규제수렴을 추구할 것임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무역협상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인 규제수렴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양측의 FTA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도 존재하는 바, 앞으로의 추이를 면밀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측이 기체결 FTA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통상질서가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미국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 미국은 TPP와 TTIP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양 협상을 조

13) De Gucht EU 통상장관 2013년 10월 미 · EU 규제협력 위원회(Regulatory Cooperation Council) 발언.

율하는 가운데 상호간에 레버리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다만, 한 쪽의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다른 한쪽 협상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유럽의 시각에서는 미국이 TTIP에 비해 TPP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TPP는 성장이 높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광역 FTA이며,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 미국 통상정책의 핵심축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이 TPP의 협상결과를 TTIP에 반영시키고자 시도할 것이라는 추측 때문이다.

TTIP는 대서양 양편에서 추진되는 무역협상이나, 동아시아에서 추진되고 있는 RCEP을 촉진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미국의 TPP를 통한 환태평양, TTIP를 통한 환대서양 공략은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논의 활성화와 특히 중국의 적극적 FTA 추진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FTA를 비롯, 한중일 FTA, RCEP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통합 논의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 특히 현재 TPP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EU FTA로 인한 시장접근성 약화와 영향력 감소에 대한 우려로 활발하게 FTA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다자체제(WTO)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두 축이 광역 FTA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WTO가 통상법원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볼 때 글로벌 통상 규율의 기준 제시를 통해 복수국간 협정 등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다자체제 하의 협상에 기여할 가능성 또한 있다.[14] TTIP를 통해 통상규율(rule) 또는 기준을 설립한 후 이를 다자화시키는 것이 미국과 EU의 목적이며, 이는 양측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가령, 드휴트 EU 통상장관은 TTIP를 통해서 다루어진 복잡한 문제들은 나중에 다자차원에서의 규율을 정립하여 공백을 메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5.2. 한국의 대응방향

한국의 대응은 크게 정부와 기업차원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정부차원에서는 미국과 EU가 각자의 FTA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각 FTA의 이행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TTIP에 참여하는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한편,

14) 일부 예를 들어보면, GATS의 성립과 WTO 하의 전자상거래 논의의 확산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초 북미자유무역(NAFTA) 협상 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서비스 무역자유화는 당시 다자체제하의 서비스 무역협정(GATS, 1994) 추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미국과 EU는 양측 합의를 거쳐 정보통신기술(ICT) 확산에 대한 원칙을 WTO에 제시한 바 있는데, 이는 다자체제에서 전자상거래 논의에 기여한 바 있다.

TTIP는 시장접근 분야에서 양측의 기체결 FTA 중 가장 수준 높은 FTA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미, 한·EU FTA의 양허수준과 비교하여 미래최혜국 대우 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지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차원에서는 우선 단기적으로 협상이 타결되고 발효되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그동안 FTA 특혜관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미국과 EU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입지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비관세장벽의 주요 수단인 규범 및 표준 제정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 산업계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참여, 사전에 파악하는 한편,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전향적인 로비는 개별 기업차원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산업협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미국과 유럽의 표준개발은 민간이 주축이 되어 관계기관과의 밀접한 협의 하에 이루어지는 바, 현지 협회의 회원가입 등을 통해 동종업계의 동향파악은 물론, 표준 및 규제관련 입법 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미국과 EU의 거대시장이 통합됨으로써 나타나는 사업기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로 인한 무역·투자구조의 변화를 글로벌 가치사슬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참고문헌

강유덕. 2011. EU 신통상정책의 내용과 시사점 . 「KIEP 지역경제포커스」 제11-0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_____. 2013. 최근 EU의 FTA 정책방향과 전망 미·EU FTA, EU·일본 FTA 추진을 중심으로 . 「KIEP 지역경제포커스」 제13-19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귀·강유덕·이경아. 2013. 미·EU FTA의 전망과 영향 .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3-06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정수. 2013.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그 시사점 . 「KERI Brief」 13-05. 한국경제연구원.

전혜원. 2013. EU·미국 관계의 현황과 전망: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중심으로 .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13-10.

KOTRA 해외시장정보. 미국-EU TTIP 농수산식품분야 주요 쟁점. 2014년 4월 29일.

Akhtar, Shayerah I. and Vivian C. Jones.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Negotiation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February 4, 2014.

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ECIPE). 2012. Prospects for transatlantic

FTA, Implication for Japan and the Global Trading System.
Ecorys. 2009. Non-Tariff Measures in EU-US Trade and Investment-An Economic Analysis.
European Commission (EC). 2010. Trade, Growth and World Affair: Trade Policy as a Core Component of the EU s 2020 Strategy, COM(2010)612 (November 2010).
European Commission (EC). 2014. EU28 agricultural trade with United States.
Francois, Joseph. Reducing Transatlantic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An Economic Assessment Final Project Report March 2013.
Hamilton, Daniel S. and Joseph P. Quinlan 2012. The Transatlantic Economic 2012 . Center for Transatlantic Relations, Volume 1.

언론보도

Bloomberg. Ken Monahan. U.S. Exports Would Avoid $6 Billion a Year in Tariffs in a U.S.-EU Trade Deal , Bloomberg Government Study, November 2, 2012.
Financial Times. Merkel says eurozone not closed shop to UK , 24 January 2013.
Global News, "US-EU FTA negotiations will start economic NATO brewing", 28 February 2013.
Inside US Trade, "Without Agriculture, U.S-EU FTA Would Struggle In Congress" 12 November 2012.
The Guardian, David Cameron sets free trade agreement as his G8 priority , 1 Januarty 2013.
Le Monde. "La France et l Allemagne favorables une zone de libre-échange avec les Etats-Unis", 13 February 2013.